

# 현직 프리미엄 누른 변화 바람... 절반 가까이 물갈이

## 광주·전남 조합장 선거 결과 분석

사상 첫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 조합장 선거가 광주·전남에서도 순조롭게 치러졌다. 애초 선거운동방식 제한을 등에 업은 현직 조합장들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결과는 의외였다. 현직 프리미엄에 70~80%대의 당선율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거의 '물갈이'가 이뤄지면서 유권자들의 선택과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수협과 산림조합을 제외한 광주·전남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 당선인 161명 중 현직 당선자는 89명으로 당선율은 54.7%였다. 광주 지역 농협 조합장 당선인 16명 중 현직 조합장 9명만 당선됐고, 무려 7곳의 조합장이 갈리게 됐다. 전남 지역 농협도 당선인 145명 중 현직 당선인은 무투표로 당선된 22명을 포함해 80명에 불과했다. 전남 지역 현직 당선율은 55.2%이며, 일반후보자 당선율은 44.8%였다.

이 같은 현상은 '깜깜이 선거'로 현직이 유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른 결과다. 토론회와 발표회를 전면 금지해 유권자와 후보자가 접촉할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현직들만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10선 도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목포농협의 오정숙 현 조합장도 애초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으나 투표결과는 전체 1506표 중 531표를 얻는데 그쳐 738표를 받은 박정수 후보에게 패했다.

현직들의 대거 탈락에 대해서는 기존 조합장들의 조합 운영방식에 대한 반발과 전국 첫 동시 선거라는 새로운 선거방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 사이에 새로운 조합장으로 바뀌보자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선거를 통해 신임 조합장들이 대

## 농협 161명중 현직 89명 당선

### 전국 동시선거 공정성 확보 성과 불·탈법 여전...선거제도 개선 여지

거 등장한 만큼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도 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면서 '돈 선거' 오명을 벗고 보다 공정하게 진행된 점이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지만 강한 규제로 후보자를 알릴 기회가 극히 제한된 점과 여전히 금품, 향응 등 불·탈법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거 개별 조합장 선거 당시 보장됐던 토론회와 정책 발표회 등이 전면 금지되면서 "후보가 누군지 알 수도 없었다"라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 외에도 지역 리더로 불리는 자리임에도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가 없는 점이나 조합원 자격을 정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선거가 진행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전 선거에 비해 불·탈법 사례가 줄기는 했지만 광주·전남에서만 100여건이 넘는 적발돼 선관위가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에서 조사중인 사건도 많았다. 이 때문에 향후 선거결과에 수긍하지 못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방침이다"며 "다음 선거부터는 위반행위가 줄어들어 공명선거 제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2일 울산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구성(왼쪽) 대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간부들과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타협기구 공청회...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불 붙었다

### 새정치 "공적연금 보장 수준 올려야"

### 공무원노조 "소득대체율 60% 수용"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 안을 밝히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가 12일 소득대체율에 대한 일반적 입장을 밝혀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소득에 대한 퇴직 후 소득의 비율로 수급액 삭감과 기여금 인상 폭 등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좌표가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 부분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대 가입기간인 33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은 62.7%이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5% 수준으로 낮추고, 국민연금은 45%로 인상에 공적연금 전체 평균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1.9%인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25%까지 낮추도록 한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적용하면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45~50% 수준(퇴직수당 인상 포함)으로 야당의 주장과는 상

당한 차이가 있다. 공무원노조 측 입장 역시 새누리당안과는 달라서 합의까지는 협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대타협기구에 노조 측을 대표해 참석한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과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위원장은 이날 "적정 노후소득대체율 60% 수용을 합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 역시 공무원연금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공청회와 분과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구체적 개혁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당선인 196명중 12명 수사 대상

### 전국 181명...수십곳 재선거 불가피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4년간 조합을 이끌 광주·전남지역 조합장 196명이 선출된 가운데 12명이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81명이 수사 대상이다. 이는 전체 당선자 1326명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 수십 곳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 경찰청과 각 지역 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기 34명을 비롯해 충북 15명, 광주·전남 12명, 강원 12명, 제주 9명, 전북 7명, 세종·충남 6명, 대구 5명 등 전국적으로 181명의 당선인이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이미 구속됐다.

위반 사례로는 사전 선거운동과 돈 봉투 등 금

품을 제공한 것이 주를 이뤘다.

이 외에도 측근들이 수사받는 사건에서 공모 정황이 포착되면 당선인도 추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인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위탁해야 하며,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해야 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처음 실시한 동시 선거인 만큼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인들이 많은 것 같다"며 "선거가 반복되면서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인식이 정착된다면 앞으로 불법 선거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모든 도로에 LED가로등...광주 밤거리 밝아진다 전국 지자체 첫 규격화 제품 개발

아둡고 칙칙했던 광주의 밤 거리가 밝아진다.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오는 7월부터 표준 LED가로등 규격을 제정하고, 표준 규격화된 제품을 모든 도로에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표준 규격 LED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기존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과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유지 관리비 등 연평균 7억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지역 LED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등 1석2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에에서 도입할 표준 규격 LED가로등은 모듈과 전원 공급 장치를 세분화하고, 등기구의 효율·크기·중량 등을 표준화해 업체간 부품 호환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고장 등이 발생해도 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고장이 난 모듈만 교체할 수 있어 유지 보수도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표준규격의 사양서는 3개월 이상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관련 업체는 이 기간 동안

제작 과정을 마치고 KS·고효율 제품인증과 한국

광기술원 실증센터의 시험을 통과하면 시에 납품할 수 있다. 시는 순차적으로 광주지역 모든 가로등을 표준 규격화된 LED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문범수 광주시 도로과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LED가로등 규격을 표준화했으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면 타 지자체의 구매가 기대되는 등 지역 LED산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1위 최고의 새마을금고

# 2015 광주시 골목상권 정책자금대출 출시!!

**각종 도·소매업/음식점  
주점업/서비스업 등**

식당, 학원, 노래방, 당구장,  
카센터, 사진관, 컴퓨터수리,  
세탁소, 세차장, 미용실,  
피부관리, 방앗간, 스포츠시설,  
PC방, 전통시장상인 등

**연 이 율 1.25 ~ 1.4%**

**대출기간 3년/5년**

**최 고 2천만원**

**※36억 선착순 접수  
(기존 대출자도 가능)**

더 행복한 우리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신분증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